

배포 2024. 11. 18.(월)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4. 11. 19.(화) 브리핑 시(10:00)
(지 면) 2024. 11. 19.(화) 브리핑 시(10:00)

현장에 뿌리내린 교육개혁,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로

-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3대 분야	9대 과제	핵심 성과
국가책임 교육·돌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보통합 늘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 교육부로 일원화 →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 첫걸음 ▶ 늘봄학교 초1 희망자 29.3만명(전체 초1 82.7%) 전원 참여, 학부모 만족 80% ↑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학교 교실혁명 입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학교 회원 수 9.3만 명, 누적방문 283만 회, 함께 차담회 총 54회 → 온오프라인 소통으로 생생한 현장 의견 반영 및 신속한 정책 실현 ▶ 선도교사 1만 명 대규모 연수, 선도학교 1천 교 운영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기틀 마련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 사안처리 객관성·공정성 강화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5법 개정 완료, 교권침해 직통번호 개통(1395)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엄정 대응,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발전특구 글로벌대학 대학 혁신 생태계 교육부 대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총 56건 지정 → 교육의 힘으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 라이즈 예산 2조 원 편성, 글로벌대학 20개 지정 →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마련 ▶ 국가장학금 최대 50만 원 인상, 연합기숙사 확충 → 대학생 학업·주거여건 개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월 19일(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교육개혁

교육부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2024년은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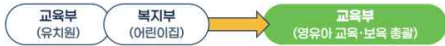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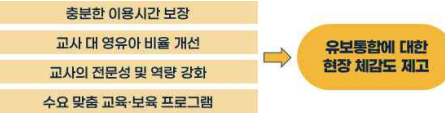

국가책임 교육·돌봄

⇒

저출생 위기 대응

교육부는 0~11세의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① 유보통합 실행의 기반 마련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유보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로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 체계 일원화('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24.6.) ▶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약 150여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세 유아교육·보육료 추가(월 5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기준 확정안 발표('24.12월) ▶ 지방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24.12월)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보통합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으로써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지난 30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 따라 서비스 및

지원체계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0~5세)가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된다.




※ ‘유보통합 추진 방안’(‘23.1.),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23.7.),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23.9.), ‘유보통합 실행계획’(‘24.6.)

특히, 영유아·학부모·교사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현장의 변화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약 150여교 대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1일에 ‘유보통합 포털’ 개통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학부모의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향후 적용될 통합 기준(교원 자격, 명칭, 설립·운영 기준 등)은 토론회·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와 협력하여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② 늘봄학교 현장 안착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늘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1 희망자 전원 29.3만 명 참여 (전체 초1의 82.7%) ▶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 제공(10월 기준 41,354개) ▶ 학부모 80% 이상 만족 	<p>모든 초등학생으로 단계적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초2 확대에 대비하여, 현재 초1 학부모 대상으로 사전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 ▶ 대학 연계 늘봄 프로그램, 공공·민간기관 프로그램 등 양질의 프로그램 준비 ▶ 교내 추가 공간 확보, 지역사회 공간 발굴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새로운 종합 교육 체제인 늘봄학교를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한 결과 2024년에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천 명(전체 초 1의 82.7%)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4만 개 이상 제공하였고,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24.8. 교육청별 1학기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우선 내년을 대비하여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교육청별·학교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하였고, 예비 초1 학부모에게는 취학통지와 예비소집 등을 계기로 늘봄학교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소상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내 추가 공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간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 ⇒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인재 양성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함께 차담회’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등에도 적극 대응하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함께학교’를 통해 만들어 가는 교실의 변화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함께학교	<p>▶ “함께학교” 가입자 9.3만명(11.18.기준)</p> <div><div>가입자 9.3만여 명 <small>* 11.18 기준</small></div><div>누적 방문 283만 회</div><div>일평균 8천 명</div><div> </div></div> <p>▶ 함께차담회 총 54회(매주 1회)</p> <p>▶ 교사의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적용- 학생의 온라인 출결관리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p>▶ “함께학교” 가입자 10만 명 달성(연내)</p> <p>▶ “함께학교” 플랫폼 서비스 확대</p> <table><tr><td>교원</td><td>‘수업의 숲’ 연수시간 인정 ('25.3 ~)</td></tr><tr><td>학생</td><td>진로진학설계플랫폼 도입 ('25.1 ~)</td></tr><tr><td>학부모</td><td>1:1 전문가 상담 확대 ('24.11 ~)</td></tr></table>	교원	‘수업의 숲’ 연수시간 인정 ('25.3 ~)	학생	진로진학설계플랫폼 도입 ('25.1 ~)	학부모	1:1 전문가 상담 확대 ('24.11 ~)
	교원	‘수업의 숲’ 연수시간 인정 ('25.3 ~)						
학생	진로진학설계플랫폼 도입 ('25.1 ~)							
학부모	1:1 전문가 상담 확대 ('24.11 ~)							

2023년 11월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 이래 회원 수 9.3만여 명, 누적 방문 283만 회, 일평균 8천 명이 방문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로 성장해 왔다. 또한, 부총리 주재로 주 1회 ‘함께 차담회’를 개최하며 교육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함께학교와 함께차담회를 통해 총 905건의 정책이 제안되었고, 이 중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적용, 온라인 출결 관리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이 정책으로 실현되었다.

②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 추진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역량 강화(선도교사 1만 명, 일반 교원 15만 명,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3,000교)추진 수업·평가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 연수체계 구축 <div> 연수 예산 확보 (24. 3,818억원)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지원 방안 (24.4.) → 역량 체계에 따른 모든 교원의 맞춤 연수 추진 </div>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1,046교), 연구학교(65교) 운영 ▶ 기기(디바이스) 완비, 네트워크 점검·개선 등 기반(인프라) 구축 추진 	<p>AI 디지털교과서 본격도입</p> <p>수학, 영어, 정보, 국어 (특수) 도입 학년 및 과목 단계적 확대</p> <p>2025 → 20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결과 발표(11.29)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교사·학부모·학생 사전 체험 등을 위한 박람회·웹전시(12월~) ▶ 디지털 기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별 교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집중 연수 및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25.2)

교사가 디지털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23.2.)’,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23.6.)’,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지원방안(’24.4.)’,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24.5.)’ 등

먼저,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2024.11월 말 검정결과 발표)가 개발되어, 2025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교사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약 1만 명의 선도교사 연수(~’24.8.)를 실시하였고, 15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연수 및 ‘찾아가는 학교 상담(컨설팅)’ 연수(~’25.2.)도 진행되고 있다. 전국 1,046개의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적용 학년(초3·4, 중1, 고1)을 위한 1인 1기기(디바이스)를 완비했고,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 속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0G까지 증속 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하여 학교에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테크센터도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③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학교폭력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23.4.)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2,217명),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1,127명) <div> <div>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2,217명)</div> <div>학교전담경찰관 확대 (105명↑, 1,127명)</div> <div></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포럼 개최('24.11.) ▶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5~'29) 수립('25.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23.9.,12.) 및 시행령 시행('24.3.) ▶ 교권보호위원회 이관(학교→교육지원청)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개편('24.3.)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24.3.~) <div> <div>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div> <div>→</div> <div>사안 신고 + 심리·법률지원 연계</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24.12.) ▶ 교원 맞춤형 심리도구 개발 보급(~'24.12.)
사교육 카르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운영('23.6.~) <p>※ 1,275건 접수·처리('24.10.31.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킬러문항 및 사교육 유사문항 없는 '공정수능'을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및 특별점검('24.11.~'25.1.) <div> <div>신고대상</div> <div> <div>편·불법 입시컨설팅 전문학원 또는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종합학원 등</div> <div>무등록·미신고 교습</div> <div>교습비 초과징수</div> <div>거짓·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div> </div> </div>

(학교폭력 근절) 중대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SPO) 105명 증원,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2024.1학기) 등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2,217명)을 위촉하여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요내용) 피해학생 분리 요청권·전담지원관 도입, 긴급조치 강화, 학교폭력 조치 사항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2026년부터 학교폭력 기록 대입 반영 의무화 등

내년 상반기에는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하여 사이버폭력 등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2023.8.),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특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70%(485건/695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되었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85.5%(194건/22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22) 1,702건 → ('23) 852건)하였다.

* ('23.9.)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23.12.) 「아동학대처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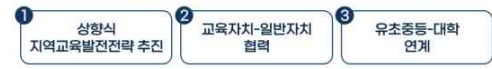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여 체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23.6.),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 의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4.6)하여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시철에 맞춰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24.11.~'25.1.)하고 있다.

또한, 수능과 관련해서도 작년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현직교사로 구성된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킬러문항을 배제함으로써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하였으며,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24.3.)’을 통해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를 체계화하여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학자금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① 지역 교육력 제고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교육발전 특구	<p>「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 (23.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지역 총 56건 선정 ▶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 선정 ▶ 자율형 공립고 2.0 86개교 선정 	<p>교육의 힘으로 지역 정주여건 변화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발의(~'24.12월) ▶ 자율형 공립고 2.0 연내 100개교 선정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협력하여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으로 총 56건(광역지자체 7개 및 기초지자체 83개)의 시범지역이 선정되었다. 시범지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에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86개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하였다.

* 기회발전특구(산업통상자원부), 도심융합특구(국토교통부), 문화특구(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하여 각 지역 발전 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연내 100개교 선정을 목표로, 협약형 특성화고는 2027년까지 35개교 육성을 목표로 추가 선정하여 선도적 학교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②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본격 가동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R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즈 예산안 편성(총 2조 10억원) ▶ 7개 라이즈 시범지역 운영('23~'24) ▶ 17개 시도 전담부서 정비 및 라이즈 센터 지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라이즈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라이즈 지원전략' 확정('24.12.)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ackground-color: #e0f0ff; padding: 2px 5px;">지자체</div> <div>지역별 5개년 계획 본격 시행</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ackground-color: #e0f0ff; padding: 2px 5px;">교육부</div> <div>관계 법령 개정 추진</div>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시도별 '라이즈 5개년 계획' 확정 및 국고 지원액 대비 20% 이상 지방비 매칭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대학 1차 10개, 2차 10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동행형 규제개혁 추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4.2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대학 제안 기반 규제특례 적용(계속)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bff; color: white;">제도개선·규제개혁 이행 방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대학에 적용 가능한 과제 → 법령·지침 개정 통해 일괄 개선 (전체 적용) 글로벌대학 적용 후 확산 과제 → 규제특례 등 성과분석 후 법령·지침 개정 (특례 적용)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이행 협약('24.12)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라이즈와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대학30에 20개 대학이 선정되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과 파급력이 높은 모델에 정부가 집중 투자(5년간 교당 최대 1천억 원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등)하고 있다.

아울러, 라이즈로 내년부터 지자체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지원예산으로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 또한 학·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17개 시도에서 라이즈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컨설팅), 실제 사업관리 예행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국립대학 통합 거버넌스, 대학-출연연 융합, 지역 특화산업연계 해외 진출, 사립대학 재정 확보 등 글로벌대학에서 창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모든 대학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③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 지원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청년 학자금 및 주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구간: 50만원 인상  • 4~6구간: 30만원 인상 ▶ 학자금대출 저금리(1.7%) 유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 확대 ▶ 연합기숙사 2개(1,698명) 준공, 3개(1,799명) 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div> <div>2024년</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구간: ~8구간 • 지원대상: 약 100만명 </div> <div>→</div> <div> <div>2025년</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구간: ~9구간 • 지원대상: 약 150만명 </div> </div> </div> ▶ 2025년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div> <div>14만명 지원 (24)</div> <div>→</div> <div>20만명 지원 (25)</div> </div> ▶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월 최대 20만원) ▶ 연합기숙사 2개(1,836명) 추가 착공 예정(24.12.) <p>※ (참고) 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p>

(**학자금 지원**)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단가를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시중보다 낮은 1.7% 저금리로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 (국가장학금 I 유형) 대학생 가구(부모, 본인, 배우자) 소득에 연계하여 등록금 차등 지원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현재 약 14만 명 수준의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최대 20만 명까지 늘린다(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

(**주거 지원**)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동소문과 대구에 총 1,698명 수용이 가능한 연합기숙사를 개관하였다. 올해 연합기숙사 3개(용산 연합기숙사, 한국체육대 연합기숙사,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연합기숙사)가 추가로 착공되었고, 2024년 안에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부지에 2개의 연합기숙사가 추가로 착공될 예정으로,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게 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내년부터 신설될 예정이다(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

교육부는 지난 해인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그간 충실히 닦아 온 기반 위에서 교육개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수반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개혁은 3대 분야, 9개 과제의 큰 틀 속에서 마련된 주요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 이로 인해 아직 교육개혁에 따른 성과를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 현장 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학점제의 도입, 라이즈 체계의 전국 가동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남은 2024년 동안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간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업인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교육 분야 정책 성과 관련 주요 현장 사례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책임자	과 장	신광수	(044-203-6026)
		담당자	서기관	황소정	(044-203-6029)
<유보통합>	영유아지원관 영유아기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민미홍	(044-203-7124)
		담당자	서기관	신정선	(044-203-7152)
<늘봄학교>	교육복지늘봄지원국 늘봄학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예혜란	(044-203-6603)
		담당자	사무관	전민환	(044-203-6604)
<함께 학교>	교원학부모지원관 학부모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현정	(044-203-6212)
		담당자	교육연구관	권기정	(02-6373-2090)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영훈	(044-203-6465)
		담당자	사무관	박경령	(044-203-6478)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현주	(044-203-7046)
		담당자	사무관	정지은	(044-203-7058)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도영	(044-203-7066)
		담당자	사무관	정미경	(044-203-7078)
<공교육 정상화>	학생건강정책관 학교폭력대책과	책임자	과 장	박혜원	(044-203-6972)
		담당자	사무관	이유림	(044-203-6978)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혜진	(044-203-6480)
		담당자	교육연구관	여인경	(044-203-6487)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책임자	과 장	안주란	(044-203-7172)
		담당자	사무관	김재경	(044-203-7181)
<지역 교육력 제고>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	책임자	과 장	최수진	(044-203-6340)
		담당자	사무관	김영현	(044-203-6354)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책임자	과 장	마소정	(044-203-6682)
		담당자	사무관	김성현	(044-203-66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욱	(044-203-6397)
		담당자	사무관	우연선	(044-203-6402)
<지역-대학 동반성장>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성하	(044-203-6232)
		담당자	서기관	김재극	(044-203-6235)
		담당자	사무관	김희준	(044-203-6236)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 지원>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양주	(044-203-6267)
		담당자	서기관	최지웅	(044-203-6272)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	책임자	과 장	배정익	(044-203-6299)
		담당자	사무관	변정을	(044-203-6318)

□ **늘봄학교**

(대구 달산초) 학교 적응을 돕는 놀이 중심 예체능 프로그램

- ▶ ‘1+1’ 꿈교실(놀이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쉽교실(학교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아침늘봄, 틈새늘봄, 하교도우미, 방학늘봄 등 사각지대 없는 운영을 통해 아이와 학부모가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
- ▶ 지역대학, 공공도서관, 이야기할머니 프로그램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놀이 중심 예체능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교적응 및 학생 성장 지원
- ▶ (현장의 목소리) 교실몸놀이, 몸튼튼맘튼튼 놀이, 동화나라 종이공작소, 오카리나, 난타 등 학생들이 좋아하고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부산 명지늘봄전용학교) 지역 늘봄 수요에 대응하는 거점형 늘봄

- ▶ 부산 강서구 명지지역 7개(토요일 8개) 초등학교의 1~3학년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시간 외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용 기관을 마련하여, 지역의 늘봄 수요에 공동 대응
- ▶ 교육부의 예산 지원과 부산광역시의 부지 제공을 통해 부산교육청이 직속 기관 형태로 신설하였으며, 교육청이 직영하기 때문에 학교의 늘봄 행정 부담 대폭 완화
- ▶ 최대 5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에서 AI 로봇, 발레, 펜싱, 영어 뮤지컬 등 개별 학교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특색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
- ▶ (현장의 목소리) 기존 학교에서 늘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3학년 학생 대상으로 따뜻한 ‘보살핌 늘봄’과 양질의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유보통합

(경기 참한빛유치원) 아이와 학부모가 웃음짓는 질 높은 교육·돌봄 보장

- ▶ **(12시간의 질 높은 교육·돌봄 보장)** 협력강사와 연장전담 교사가 추가 배치되어 영유아 개별 맞춤형 교육, 체계적인 교육과정, 안전한 교육 환경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아이와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 ▶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유아의 개별 발달과 흥미를 반영한 놀이중심교육 운영, 선택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놀이 추가 제공,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와 연계한 이음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 극대화, 학부모의 교육과정 이해도 향상에 큰 도움
- ▶ **(현장의 목소리)** 교사가 추가 배치됨에 따라,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보다 세심한 보살핌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서 학부모 및 교사 등 현장 만족도가 높음

(충남 차암어린이집)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사 역량 강화

- ▶ **(영유아 선택형 프로그램 지원 강화)** 연장반 교사 증원으로 오감놀이·코딩놀이·피아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이의 흥미와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 가능
- ▶ **(지역사회 및 가정 연계 강화)** 숲 생태체험교육(태학산 휴양림 연계), 장애인식 개선교육(누리별 장애인종합복지관 연계), 인성·반편견교육(도서관 연계), 건강 캠페인 활동(천안보건소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부모 참여 활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교육과정-가정 간 연계 강화
- ▶ **(현장의 목소리)** 교사 연수 및 연구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교사 간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어 교육의 질 제고와 교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AI 기반 수업을 통한 학생 맞춤 교육 실천 사례

- ▶ (경북 초전중) 학생들이 개인 태블릿을 활용해 형성평가를 진행하니 수업 준비가 간편하고 편리해졌다. 형성평가 후 학생들의 정답률과 오답률을 확인해 학생들의 성취도를 정확하게 분석하였다. 부족한 개념에 대해 복습하고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맞춰 난이도별 학습지를 제작해 제공하니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성취도가 향상되었다.
- ▶ (부산 배화학교) 영상에 자막을 입혀주는 AI 코스웨어는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박자를 알려주는 디지털 기기는 청각장애 학생이 음악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서울 중광초) 디지털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2023년엔 전체 기초학력 미달학생 19명 중 18명이 기초학력을 달성하였고, 2024년 3월 기초학력 미달학생 18명이 9월 진단평가지 기초학력을 달성하였다.

선도교사 연수를 통한 교원 역량 강화 사례

- ▶ (경기 현00 교사) 이제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던 학습자 분석과 개별 맞춤형 학습을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와준다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 ▶ (전북 조00 교사) 연수를 마치고 만약 도전하지 않았다면 발전도 없이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겠구나 싶었다. 문해력이나 표현력에 격차가 있는 밀착 대면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고, 심화문제로 나아가고 싶은 학생도 있는데 교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사례를 넣어 지도해야할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대응

사교육 카르텔 처리 사례

-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운영('23.6~) 및 계기별·이슈별 집중 신고기간(4회) 운영
※ (접수) 1,275건 접수 및 처리('24.10.31.기준)
- ▶ 교원 영리행위 자진 신고기간('23.8.1.~8.14.) 운영 및 수능 출제 관련자 24명, 문항거래에 참여한 사교육업체 21곳 고소 및 수사의뢰
- ▶ 수능 출제위원 선정 기준 강화, 현직교사 중심의 '출제점검위원회' 운영을 통해 킬러문항 없는 수능(모평) 출제('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 학교폭력 근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학교 현장의 만족도 향상

- ▶ (맞춤형 조사관 배정)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퇴직교원 출신의 조사관을 배정하고, 성 사안은 여성 조사관을 배정하는 등 학생의 연령과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사관을 배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조사 실시
- ▶ (교원의 업무 경감) 그동안 교사가 담당하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함으로써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데 도움
- ▶ (현장의 목소리)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등 업무경감, 민원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감소, △교원과 학부모 간 감정 대립 및 의견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악성 민원 해소, △조사관이 사실확인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진행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우수사례

- ▶ (부산) 퇴직교원 3명, 외부 위촉변호사 51명 등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희망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 지원 제공
- ▶ (인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실'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강화
- ▶ (대전) 전국 최초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원스톱 심리상담·코칭 제공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사례

- ▶ (사례 1)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중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팔을 잡았고 이에 '신체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함
- ▶ (사례 2) 담배 피우는 학생 대상 생활지도를 한 교사를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
⇒ (교육청 → 수사기관)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제출
 ⇨ (수사기관) 교육감 의견 참고하여 수사 후 '혐의없음 송치'
 ⇨ (검사) 교육감 의견 참고하여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 교육발전특구

(부산) 온 마을이 나서서 모든 아이들을 품는 부산 늘봄학교

- ▶ (따뜻한 보살핌 늘봄) △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희망하는 초1~3 보살핌 늘봄 100% 수용, △ 보살핌을 중심에 두고 학습을 지원하는 '제2의 학교 모델' 늘봄전용학교 운영, △ 3세~초3대상 긴급 보살핌을 제공하는 '24시간 긴급보살핌늘봄센터' 운영
- ▶ (특화된 학습형 늘봄) △ 희망하는 초1~3 대상 매일 2시간 놀이 체험 중심의 학습형 늘봄, △ 전국 최초 부산 늘봄학교 교육과정 및 교재(한글놀이, 놀이수학, 놀이영어) 개발·보급, △ 대학·지역기관·교육청 직속기관의 우수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지역특화 늘봄
※ 16개 지역대학, 86개 프로그램 / 13개 지역기관, 142개 프로그램, 30개 직속기관, 310개 프로그램

(서산) 지역산업 연계형 특화 교육

- ▶ (개요) 충남교육청과 서산시청, 그리고 지역 대학인 한세대가 협력하여 지역의 주력산업인 화학과 자동차, 그리고 차세대 산업인 도심항공교통과 항공 분야와 연계한 특성화 교육을 추진
- ▶ (운영 방법)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에듀체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업 연계 교육 강화
- ▶ (향후 계획) 교육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이에 따른 시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후 상시교육 체계 구축

(순천고) 자율형 공립고 2.0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 ▶ 학부모·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 교육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순천대 협약을 통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 ▶ 지역 및 국가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립순천대와 공동으로 그린스마트팜,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 관련 지역특화형 교육과정(흑두루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대학 교수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한 수업, 실험 프로젝트,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진행
- ▶ (현장의 목소리) 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반응이 좋고, 고교 교사-대학 교수인력의 협력 수업은 교원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어 인근 교육청·학교와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힘

□ 라이즈,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

라이즈 도입을 위한 지역의 노력

- ▶ 모든 지자체가 지역의 발전전략과 지역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제도를 연계하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대학 동반성장 계획을 수립중임
- ▶ 경북은 '1시군-1대학-1산업'의 연결체계로 대표되는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부터 RISE 재원과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봉화·의성과 같이 대학이 없는 지역에 전담 대학(대구가톨릭대·영남대)을 매칭하여 대학이 바이오 등 주력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여 주력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정주 인구 확보까지 도모하고 있음
- ▶ 대전은 정부출연연을 포함해 다수의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혁신역량이 높은 지역적 특색을 십분 살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 지역전략산업 연구개발에 정부출연연의 역량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음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를 혁신 선도모델 창출

- ▶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혁신계획 중 혁신성과 파급력이 높은 모델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학 사회에 건강한 혁신 경쟁* 활성화
 - *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사조직 전면 개편, 대학 간 통합·연합을 통한 역량 집적, 대학
 - 연구기관 기능 융합, 대학 내 산업체·창업 클러스터 조성,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등
- ▶ 대학구조개혁 일환으로 새로운 통합국립대학 거버넌스, 국립종합대학-교육대학 통합을 통한 완결적 교원양성체계 구축, 국립대학-공립대학 통합 모델 등 추진
 - 국립대-공립대 통합이 최초로 승인(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국립경국대, 6.7.), 이후 전국 지방공립대 6교 중 4교가 국립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등 모델 확산
- ▶ 글로벌대학 지원금을 마중물로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 의존도를 낮추고 대학의 재원 확보 채널을 다각화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재정 확보 추진
 - 포항공대는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1조2천억원의 투자 유치 계획, 울산대는 학교법인·병원·지역기업 등과 지역산업육성 기금 조성(1천억원 확보 완료, '24)

□ 청년 학자금 및 주거 지원

강릉 청년과의 대화 (2024.1.19.)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3.5.)

- ▶ (서울 이00 대학생) 9구간이라면 중산층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연 700~8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학자금 지원구간 확대로 학비 걱정을 덜게 되어 대학생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
- ▶ (전북 전00 대학생) 저소득 학생들에게 교통비와 주거비 등 생활비도 큰 부담이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 특히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확대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음

대학생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용산 연합기숙사 착공 (2024.4.19.)

- ▶ (위치)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0 다길 43-57 등
- ▶ (재원) 기부금 456억원(기장군/울주군/경주시/영광군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 ▶ (수용) 595명(299실, 장애인실 3실/2인실 296실)
 - 개관: 2026년 1학기(예정)
 - 기숙사비: 150,000 원(안)
- ▶ (규모) 지하3층 ~ 지상15층(연면적 12,082.65㎡)
 - 지하3층 ~ 지하1층: 주차장, 학습실 등
 - 지상1층 ~ 지상2층: 주민개방시설, 키즈카페
 - 지상3층 ~ 지상15층: 기숙사 생활관

